

“추가 추경 계획 없어...민생지원금 효과 높을 것”

李대통령, 취임30일 기자회견

“지원금 또 할만큼 재정상황 녹록지 않아”
“대출규제는 ‘맞보기’...부동산 정책 맞아”
“일방강행 문제악화 의정갈등 해결 가능”
“통합 국정...성향 달라 배제는 정치보복”
“檢수사·기소 분리 이견無...추석전 열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민생회복 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한 뒤 “그러나 세상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또 할 거냐는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며 “일단은 재정 상황도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언급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예상 효과와 관련, 이 대통령은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 등을 다 고려해 나름 정한 것”이라며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맞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 근본적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과 관련,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같은 게 조금 완화된 것 같다”며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 이런 시일 안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쏘면 위험하다.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다 골라내서 한쪽만 쏘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언급했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화상 연결로 지역 언론사 기자가 질문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등으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며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되고,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또 지도 존중해

야 한다. 자주 만나 뵈 생각”이라면서도 “영수회 담을 정례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

는 긴시간동안 더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열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못박았다. /김진수기자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재명 정부 1호 여야 합의 처리
이사 주주 총실 의무·‘3%룰’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역점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탄핵한 이재명 정부 출범 꼭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까지 받아 되살아났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총실 의무 대상에 회사 및 주주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정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담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연합뉴스

당대표 출마 박찬대, 일주일간 ‘호남살이’ 돌입

민주당 ‘심장’에서 ‘행동하는 경청’ 시작
“호남은 전략적 핵심 맞는 대우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사진) 의원은 7일 첫 주말부터 일주일간 ‘호남살이’에 들어간다. 방문을 넘어 호남인들과 함께 살며, 호남 당원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박 후보는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등 당내 주요 보직을 거치며 호남 정치권과 신뢰를 두텁게 쌓아왔지만 지난 대선 기간에는 호남을 거의 찾지 못했다. 이에 박 후보는 “당대표 직무대행,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지역을 지원하느라 호남인들과 직접 대면하지 못해 어렵고 죄송했다”며 “민주당 심장의 일원, 명예 호남인이 되겠다는 각오로 지역민들과 함께 할 것”이



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정치는 말이 아닌 삶이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고 믿는다”며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닌 호남인의 희망과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재명 정부의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경청’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박 후보의 ‘호남살이’는 정치적 상징성과 정책 점검을 결합한 강도 높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5일 전남 서부권, 6일 전남 동부권에서 당원 대상 토크콘서트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7일에는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어 8일에는 전북에서, 9일에는 전남에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경청투어를 갖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박찬대 후보는 ‘민심과 명심(明心)의 가교’를 자임하며 특유의 안정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입

증하겠다는 각오다. 그동안 박 후보는 호남인들에 대한 존경을 자주 표해왔다. 그는 “대선 승리를 만든 것도, 탄핵 정국을 지켜낸 것도 호남이다. 호남의 기적이 대한민국을 구했다면 이제는 그 기적의 주인공 공들이 성과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호남이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핵심에 걸맞은 대우를 받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박 출마지는 호남의 ▲초광역 인프라 투자 확대 ▲국책사업 우선 배정 ▲지역인재 우선채용 확대 ▲정당 차원의 예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약속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및 AI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및 전남 국립의대 설립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및 금융 특화 도시 조성 등 광주·전남·전북의 현안을 직접 파악하고 최대한 챙길 방침이다. /김진수기자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 샵 (골프채, 각종용품, 용구)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